

### 이낙연 전 총리, 언론 인터뷰서 이재명 리더십 직격

## “사법 문제로 도덕적 감수성 퇴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여당이 이기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것 같지도 않다”고 예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억압되고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잃게 됐다”며 “이런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 안 부결을 요청한 이후 표결 과정에서 이 대표가 나와 가결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딱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민망했

던 국면”이라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공언했을 정도로 지켜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까지 국민이 보았던 민주당과 다르고, 국민 일반이 가진 상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좀 질려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둔화한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은 웬만한 건 공개고 지나간다. 패널들이 텔레비전 나와서 그럴 또 오히려 옹호한다. 이런 게 국민을 질리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며 “이제까지 민주당은 굳건한 면역체계를 갖고 있었다.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큰 병이 든다. 그걸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인과 팬덤과의 관계에 대해 “교통처럼 안전거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성인이 되면 사춘기 때와 달리 개인 간에 적정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런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답했다. 개발(개혁의달)로 대표되는 당내 팬덤 정치 현상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부 구성 획일적 당내 민주주의 억압 팬덤과 안전거리 필요 총선 전망에 민주당 크게 이길 것 같지 않아 제3세력은 큰 변수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자신이 수박(결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계를 부르는 말칭)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딱하다. 우선 길을 함께 걸은 사람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 전망에 대해 “여당이 이기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다시 폭주하게 될 것 아닌가. 그런 비극은 막아야 한다”면서도 “여당이 이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것 같지도 않다”고 예측했다.

총선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막 열광하는 상태가 아니지 않은가. 좋다 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라도 지지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지지자들도 있다”며 “후자의 지지자들에게 응답해야 할 텐데, 그만큼 매력이나 신뢰감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의석수에 대해 “제3세력의 성적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역대 총선 평균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을 든다. 여론 조사에서 ‘지지 정당 없다’는 응답자가 많다. 직접 만나보면 꽤 공고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당층마저

도 진영화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당 성공 가능성엔 “어떤 비전이나 메시지를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총선 지원 유세에 대해 “그랬을지라도 왜 도와줘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엉망이니까 이쪽 찍어달라는 말만 해야 한다면 내가 나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며 “서로 네거티브 전쟁 하는데 용병처럼 끌려들어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알아서들 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위상에 걸맞은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1년간 있었다. 지난 8월24일 귀국해 강연을 다니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서 향후 활동에 대해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답해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

### “탈당 이야기한 적 없어 현재로서는 혁신에 몰두”

#### 민주 운영찬 의원 “당 혁신 해낼 분위기 조성 목표”

운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현재로서는 당내 혁신에 몰두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비명계 정치결사체 ‘일직과 상식’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탈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한 적은 정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내에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 하고 단순 추구를 넘어 우리 당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모으고 이것이 혁신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의 책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발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혁신을 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모임 출범 이후 당내 별다른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데 대해선 “이런 부분에서 실천을 하고 정치 결사체로 모이고 하는 부분은 의의 개개인의 굉장한 실존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저희들이 여기 참여하려고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며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전자민원모니터 성과보고회. 지난 1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자민원모니터 성과보고회 및 역량강화 교육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주 4일 근무제, 전북 발전 기회로”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여가 양극화 등 따라 위기 될 수도 제도 시행 따른 영향 분석·전북도 차원 선제 대응 필요” 강조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실행되는 등 주 4일 근무제는 가까운 미래라 자칭 주 4일 근무제가 전북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실험은 유형이 다양하다. 근로일만 단축하거나, 혹은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함께 단축하거나,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취하기도 한다. 근로일로 치면 주 4일, 또는 주 4.5일 근무제가 있고, 시간으로 치면 주 15시간부터 69시간까지 다양하다.

이슈브리핑을 작성한 장세길·천지은 박사는 “주 5일제 또는 주52시간 근무제와 달리, 주 4일 근무제는 3일

의 여가가 주어지므로 여가사회로의 전환 등 획기적인 사회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짧아도 하루 8시간에 주 5일을 근무(월-금)하지 않고 하루 10시간에 주 4일을 근무(월-목)하면 근로자는 3일(금-일)을 쉬게 되어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진다”면서, “늘어난 휴가로 전북 관광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지만, 전북에 오던 여행객이 오히려 외국으로 빠져나가 전북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5일제 시행을 경험했을 때 주 4일 근무제로 여가의 양극화 또는 산업 분야에 따라 위기가 예상된다”며 주의 깊은 정책설계도 주문하였다.

두 박사는 전북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주 4일 근무제를 전북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에 대한 분야별 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선호가 높으므로, ‘전북특별법’ 특례에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담아 선도사업을 진행하면 젊은 인재를 지역으로 유인하는 동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 4일제 맞춤형 여가활성화 기반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일이 길어졌을 때 활성화되는 분야는 고급 및 중저가 관광, 유치원생·초등학생 대상 교육, 자연 친화적 치유, 레저스포츠 등 건강 및 취미생활, 4도 3촌 등 이중 거주 등이 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주 4일 근무제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불러올 가까운 미래”라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야별로 촘촘히 살펴보고, 지역발전에 연계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발굴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예산심사 앞두고 연찬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7~18일 순창 일대에서, 도교육청 각 국장 및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의 2024년 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 대비 1,765억원(3.8%) 감소한

4조5,022억원으로 내년은 올해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교육위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사업 개요를 보고받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의문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로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들어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예산 심의 시 더욱 꼼꼼히 살펴야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국가예산 복원·전북특별법 통과 최고 속도·최대 열정으로 임하자”

### 김관영 지사, 올 도정 마무리·내년 업무준비 철저히 주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 복원과 전북특별법 통과에 긴장감을 갖고 최고 속도를 높이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울본부 위촉 가동을 계기로, 실무진이 더욱 긴장감을 갖고 최고의 속도와 최대의 열정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청원은 올 한해 도정 마무리와 2024년 업무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했다. 각 실무 분야별 선포비전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

동조합과 장애인·자활기업, 녹색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각 실국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겨울철 한파와 대설에 대비해 도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안전조치 실행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기재부가 준비하는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전북도 프로젝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안하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 “전북특자도 출범 앞서 법률개정 필요”

### 도의회 특자도 특위,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과 면담

#### 김교흥 위원장 “반드시 필요한 일” 긍정적 뜻 밝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국회의원의 명의로 각각 발의되었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 되어있는 상태다. 각 개정안은 219개의 조문(공통 206, 개별 13)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4대 자치권(농생명, 환경, 금융, 인력) 확보 △생생산업 육성 및 전환사업 진흥 등이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선언적 조항 중심의 현행법을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정부·여당 중심의 ‘전북 차별’ 기조가 강해져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자도 특위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개정안 연내 통과 필요성 및 공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흥 위원장은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면담 이후 강태창·염영선 의원은 “현재 전북도 등은 하나의 특례 조항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 발간 요청하며 협의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전북특자도 특위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면담을 기획했고, 소관 상임위원장의 긍정적 뜻을 확보한 만큼 큰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전북특자도 특위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는 개정안의 22일 법안 1소위 심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민주 김성주 의원, 소비자단체 표창 연이어 수상받아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소비자단체 표창 연이어 수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칭찬 16주년 기념 후원회’의 밤 행사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소비자단체는 매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에 상대로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지원’ 문제를 제기한 것과 함께 11월 14일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을 대표발의 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 권익증진 정치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지난 2일 김성주 의원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3한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3한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파와 신뢰성, 공공성을 갖춘 개인, 기업,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공공보건으로 전달체계 개혁,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독과점 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제안에 주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근 김 의원의 친사회적 행보가 주목받으며 각계의 치하가 잇따르고 있다. 표창장 수상 외에도 김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